

“지방 주도 성장의 열쇠는 강력한 특례·실질 권한 이양”

전남·광주 행정통합 성공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의 자율성 보장을 AI·에너지 메가 클러스터 구축 필수...민주적 통제·상생 원칙 지켜야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구의 결합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특례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주적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호남권은 지난 6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에서 가장 작은 권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번 통합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문화를 결합한 강력한 시너지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집적을 위한 ‘AI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발전사업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관련해 “4년간 20조원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통합 특별교부금 지원, 지방세 교부금 산정 특례 등을 법안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균형을 위해

특별시의회 정수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합산한 형태로 구성하고 원 구성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의 통합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행정 주도로 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 처장은 “행정통합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특별법에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례나 막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항은 일방적으로 수정되어 포함됐다”고 성토했다.

기 처장은 특히 “권한 이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주적 통제 장치”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철폐와 같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특례는 신중해야 하며, 노동권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상생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거점 대도시 육성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정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과감한 결단을”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과감한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중앙부처가 통합특별법안에 포함

된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중앙부처가 기득권 유지 논리에 갇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통합의 핵심 목표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지역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의 실질적 성과는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를 기약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보여주지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고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병훈 “성장의 길 열겠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이병훈(사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9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전남 통합시대의 비전과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며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로 5·18 민주광장을 선택한 데 대해 “전남도청 근무 시절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직접 이끌었던 곳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온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발전 전략으로 광주 도시권의 AI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 광주 연계권의 에너지·농생명 기반 자족형 경제권 구축,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 고도화와 우주 산업 육성, 서남권 해양·에너지 산업 강화, 남부권 수산·관광·신재생에너지 연계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통합시장은 행정 책임자를 넘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정치력과 현장을 움직이는 실행



력을 갖춘 리더여야 한다”며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함께 품고 실제 성과로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30대에 광양군수로 재직하며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을 완수해 현재의 광양시 출범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도정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며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여수 엑스포(EXPO)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뉴스’ 대한상의에 “엄중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한상의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사계절 관광명소

무안군



검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낙조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정(茶聖)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붉게 물들다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